

면 차기 집권가능성을 모색하기 힘든 여당 역시 새로운 정치쟁점으로서 양극화이슈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요인들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계급이슈의 동원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계급정치를 강화시킬 정치엘리트들의 동원전략 못지않게 계급통합의 대중적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여론이 계급이슈(성장/분배, 증세/감세)에 대해서는 뚜렷한 양극화현상을 보여주기보다는 경제위기론과 함께 성장우선노선에 대한 합의가 형성된 조건에서 역시 정당의 정책이 대중여론을 쫓아야 하는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2006년 초 사회적 양극화이슈를 제기한 노무현 정부가 증세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에 직면하면서 정치적 쟁점화를 보류한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결국 한국의 계급정치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여부는 정치적 엘리트들의 선거전략과 대중여론의 변동이 만들어내는 조합에 의해 역동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에 따라 계급이슈가 계속 잠재된 형태로 유지될 수도 있고, 반대로 다음 대선과 총선에서 핵심적 정치이슈로 떠오를 가능성도 공존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한국정치 분석에서 간과했던 계급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제 4 장

민주적 시민성의 성장과 민족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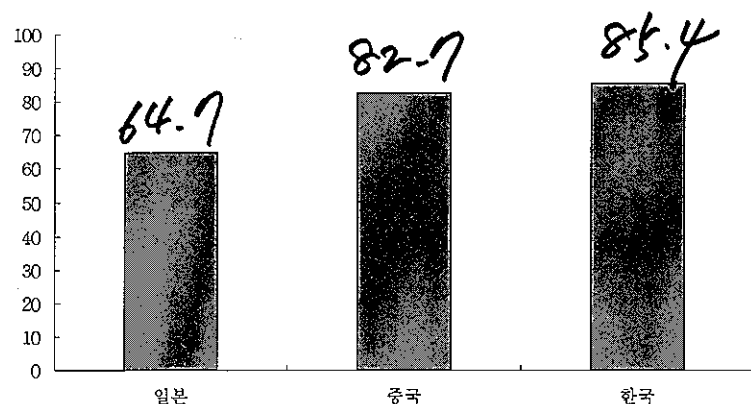
정한울 · 정원칠

1. 민족정체성의 혼란과 민주주의

이 글에서는 2000년대 이후 한국에서 민주적 시민성의 성장이 개인적 수준의 민족정체성(*national identity*)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서구학계에서는 민주적 시민성(*democratic citizenship*)과 민족정체성(*national identity*) 간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이론들이 경쟁했지만 한국에서는 세계화시대의 민족주의 역할에 대한 포괄적 논의만 진행되었을 뿐 민주적 시민성과 민족정체성 간의 관계에 대한 뚜렷한 연구성과는 발견하기 힘들다(곽준혁, 2004: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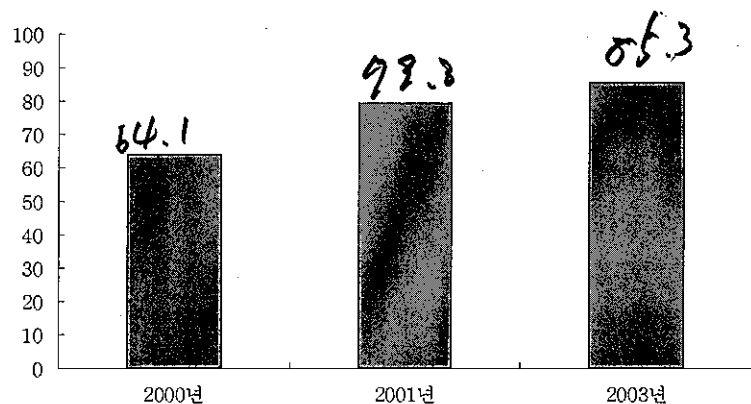
우리가 민족정체성과 민주적 시민성 간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첫째, 2000년대 이후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 민족정체성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이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4-1>과 <그림 4-2>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국민들 사이에 민족자긍심과 민족주의적 정서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주변국인 중국, 일본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과거 다수의 국민들이 스스로를 ‘어글리 코리아인’이라고 비하하

〈그림 4-1〉 2003년도 한국·중국·일본 국민의 민족 자부심 비교



주: “매우 자랑스럽다”와 “약간 자랑스러운 편이다”를 합한 비율
 자료: East Asia Barometer(2003)

〈그림 4-2〉 한국 국민의 민족자부심 변화 “나는 한국인이 자랑스럽다”(%)



주: “매우 자랑스럽다”와 “약간 자랑스러운 편이다”를 합한 비율
 자료: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2000) ; 국정홍보처(2001) ;
 East Asia Barometer(2003)

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1) 2002년 나타났던 월드컵 열기와 그 해 말에 있었던 촛불시위의 경우 사람들이 모인 목표나 성격은 크게 달랐지만 강화되고 있는 민족주의적 정서와 연결된다는 점에서는 맥을 같이 한다. 한국의 대다수 학자들은 2000년대 이후 한국에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민족주의적 성향이 확산되고 있으며 그 직접적인 원인 중의 하나로 한국의 민주화를 꼽는다(Kim Byung-Kook, 2006, 2003 ; Lee Sook-Jong, 2002 ; Kim Seung-hwan, 2002 ; Shin Gi-Wook,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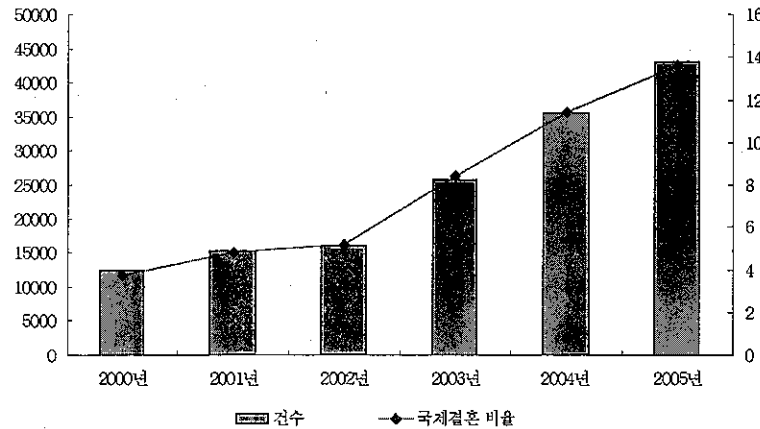
둘째, 현실차원에서 민족정체성 관련이슈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국민들의 민족주의적 정서가 보편적 인권원칙들과 서로 상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국민의 13.6%가 외국인을 배우자로 선택하고, 농촌남성의 3분의 1이상이 외국인 신부를 맞이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혼혈문제,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문제, 이중국적 허용문제 등 다양한 민족정체성 관련이슈들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판단기준이나 합리적 토론의 준거를 갖고 있지 못하며, 민족주의적 여론 앞에 정치권이나 주요언론조차 쉽게 편승하는 양상이다(곽준혁, 2004).

단적인 예로서, 2005년 5월, 이중국적에 대한 엄격한 제한내용을 담은 ‘홍준표 법안’이 여론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도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부결되는 과정에서, 민족정체성의 강화가 민주주의원칙과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2) 당시 보편적 인권을 강조하는 일부 인권·민주운동단체나 일부언론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불법하게 그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국적변경의 권리가 거부되어서는 안

1)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 초기 진실규명 노력조차 ‘매국’으로 비난받았던 사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2) 신득용, “홍준표 국적법, 박수칠 만한 일인가”,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5. 5. 18.

〈그림 4-3〉 국제결혼건수 및 비율 증가 추세 (%)



자료: 통계청 (2006. 4. 30)³⁾

된다”는 세계인권선언 15조 2항을 근거로 이른바 ‘국적취득의 자유’를 제기하면서 홍준표 법안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는 ‘애국주의’와 ‘병역의무의 형평성’의 다수여론에 밀려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다. 이념, 세대 등 한국정치의 균열요인으로 작용해온 주요변수들이 ‘애국주의’ 앞에서는 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민족주의·애국주의의 정서가 갖는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⁴⁾

이렇게 민족문제를 둘러싼 현실적 문제들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생하는 데 반해 이 문제들의 발생원인과 이후 전망에 대한 체계적이고 이론적 접근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 한국의 민주주의는 민족정체성을 강화시키는가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다룰 때 등장하는 핵심 쟁점은 과연 민주주의가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시키는가 혹은 양자가 양립가능한가의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한 축으로 놓고, 민족적 경계와 양립가능성 여부를 다른 한 축에 놓고 교차하여 2×2 이론분류틀을 만들면 〈표 4-1〉과 같다. 이 분류틀에서 볼 때, 과거 권위주의시대에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간의 관계 사이에 형성된 핵심쟁점은 주로 해당 민족공동체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국수주의적(혹은 권위주의적) 민족주의와 급진적 보편주의 사이에서 형성되었다. 즉, I 사분면과 III 사분면이 논쟁의 기본축을 이루었다(Benhbib, 2002; 박준혁 2004). 권위주의적 민족주의는 민족주의를 서구의 합리주의·자유주의라는 보편적 시민성과 양립불가능한 특수가치로 이해할 뿐 아니라 권위주의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을 동원하는 수단으로서 민족주의를 정당화하는 입장이다. 급진적 보편주의는 민주적 가치의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민주주의가 민족적 경계 없는(without borders) 세계시민의 비전을 현실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Benhbib, 2002: 415~417).⁵⁾ 1980년대 말 이후 냉전이 해체되고 전세계적으로 민주화가 확산되는 한편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권력의 초국가적 단위 또는 지역단위로의 이동, 다양성의 증가, 민족국가의 정통성·권위·통합능력의 약화’(Habermas, 1996)⁶⁾ 등의 탈민족적·초국가적 현상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인권개념이 갖는 보편성을 근거로 국경과 민족공동체의 범위를 초월하여 세계시민으로서의 시민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보편적 세계주의의 입장이 권위주의

3) “작년 13.6%가 국제결혼”, 《중앙일보》 2006. 4. 30.

4) 당시 신문들의 논조를 보더라도 홍준표 국적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선명하게 내세운 것은 내일신문 정도였다. “홍준표 국적법 문제 있다”, 《내일신문》 2005. 5. 20: 1면.

5) 표의 우하단에 위치한 극단적 분리인종주의의 경우 민족국가단위 대신 인종이나 종교와 같은 사회적 집단에 대한 정체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국수적 민족주의와 구분될 뿐 기본논리는 같다고 평가할 수 있다.

6) 박준혁(2004)에서 재인용.

〈표 4-1〉 민주주의와 민족(국가)주의간의 선택적 친화성에 따른 이론분류 7)

	인권의 보편성 (universalism) 인정	인권의 보편성 부정 (particularism)
주권의 경계인정	민주적 시민성에 기초한 민족주의: 민주주의적 민족주의 (democratic nationalism) 타미르 (Yael Tamir, 1993) 월쩌 (Michael Walzer, 1990) 드즈르 (Albert Dzur, 2002) II사분면	민주적 시민성 결여된 민족주의: 동원된 민족주의 (권위주의적 민족주의) 다렌도르프 (Ralf Darendorf, 1967) 허카 (Thomas Hurka, 1997) I사분면
주권의 경계부정	민족적 경계 없는 보편적 시민성: 급진적 보편주의 (Radical Universalism) 범세계적 시민성 (Cosmopolitan citizenship) 너스바움 (M. Nussbaum, 1997) 카렌스 (Joe Carens, 2000) III사분면	인종주의, 종교적 근본주의: 하위민족주의 (sub-nationalism) 레바인 (Andrew Levine, 1998) IV사분면

적 민족주의를 대체해왔다 (Carens, 2000). 권위주의가 동원하는 민족주의나 민족주의의 경계를 벗어나 세계시민주의를 주창하는 극단적 보편주의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는 양립하기 힘들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민족국가는 쉽게 무너지지 않고 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등에 대한 민족적 정서가 세계각국에서 강화되는 등 민족정체성을 둘러싼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했다. 그 과정에서 세계보편주의 대신 공화주의적 전통에서 있는 민주주의 이론가들을 중심으로 극단적 보편주

7) 이 분류들은 논의의 편의를 위해 필자가 임의로 잡은 틀로서 보다 면밀한 검증은 필요로 한다. 이 표에 나오는 이론가들의 핵심주장에 대해서는 갓만 (Gutmann, 2002), 드즈루 (Dzur, 2002), 벤하비브 (Benhabib, 2002), 최장집 (1996), 박준혁 (2004) 을 참조하였다.

의에 대한 비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들어와 새롭게 논쟁의 한 축을 차지하기 시작한 민주적 민족주의 (liberal nationalism 혹은 republican civic criticism)는 민주주의와 민족주의가 서로 양립가능하다고 본다는 점에서 앞의 두 입장과 구별된다 (II사분면; Dzur, 2002: 191~194).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본 결과 결국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는 양립가능한가'라는 문제가 이론적 논쟁의 핵심쟁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 역시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간의 양립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나갈 것이다. 이는 한국의 사례가 기존이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사례가 될 뿐 아니라, 한국의 민족정체성 관련연구를 진행해나가는 과정에서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3.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1) 연구가설과 측정지표

우리는 위에서 제기한 이론적 분석틀을 차용해 개인행태 차원에서 측정된 민주적 시민성의 성장이 민족정체성 인식과 태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문제는 압텔럴 외의 주장처럼 민족정체성이라는 개념은 '개념정의의 무정부상태' (definitional anarchy)로 불릴 정도로 학계의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정체성 자체가 객관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주관적 인식태도와 연관된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Abdelal et al., 2005). 이 글에서는 개념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민족정체성의 개념은 다차원이며 복합적 개념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민족정체성의 개념을 몇 개의 주요 하위범주로 분류해 검토할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는 연구질문의 핵심은 민주적 시민성의 성장이 민족정

체성을 강화시키는가 혹은 약화시키는가의 문제이다. 하지만 민족정체성 개념이 다차원적 개념인 만큼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정의된 민족정체성 개념만을 가지고 민주적 시민성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민족적 정체성의 개념을 공동체구성원 개개인이 갖는 ① 민족공동체의 경계와 범위에 관한 인식, ② 민족공동체에 대한 심리적 애착(애국심과 소속감) 정도, ③ 주권 및 ④ 외부위협 요인에 대한 평가라는 네 가지 측면으로 분류하여 민주적 시민성개념과의 양립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한다.⁸⁾ 민족정체성을 측정하는 네 가지 차원의 지표들에 대해 민주주의의 성장이 가져오는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민주주의가 민족정체성의 강화로 귀결되는지(양립가능한지), 아니면 약화시키는지(양립불가능한지) 확인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이론적·경험적 질문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시민성'을 강조하는 극단적 보편주의의 이론이 타당하다면 민주적 시민성의 성장은 개인들이 가진 우리 공동체와 타 공동체를 구분 짓는 민족 경계 의식의 약화로 귀결될 것이다. 이 가설을 살펴보기 위해 ① 공동체 개별구성원들이 생각하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요건의 엄격성, ②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공동체의 영토적 범위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민주적 시민성이 강화될수록 소속공동체에 대한 심리적 애착(national affiliation)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민족이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라는 정의가 맞다면 민족은 개별 구성원들이 민족과 국가에 대해 갖는 심리적 애착(psychological attachment)을 통해 유지되고 표현된다(Rankin, 2001; Sidanius et al., 1997). 이 글에서는 민족공동체에 대한 일체감의 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①

8) 랭킨의 가설에 따르면 민주적 시민성의 성장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내부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애국심'(patriotism)과 같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심리적 애착(psychological attachment)과 함께 민족경계 내의 자율적 통제권을 의미하는 주권의식을 유발한다(Rankin, 2001).

애국심(patriotic), ② 소속감(membership)을 제시하고 이러한 지표들에 대해 민주적 시민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다.

셋째, 민족정체성의 핵심요인 중에서 민족주권(national sovereignty)의 식에 민주적 시민성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보편적 세계주의이론이 타당하다면 민주적 시민성의 성장은 주권인식의 약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주권을 민족경계 내의 정치, 문화적, 지리적 공간에 대한 자율적 통제권으로 정의한다면 결국 외부의 힘으로부터 정부차원의 자율적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한 측정지표가 된다. 이 글에서는 현재 주권관련 핵심쟁점 중 경제영역의 쌀시장개방 이슈 및 군사영역에서 핵주권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민족정체성이 외부집단에 대한 태도와 연관되어 형성된다면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 SIT)에 근거할 때 외부집단에 대한 위협인식은 민족정체성을 측정하는 핵심지표 중의 하나이다(Abdelal et al., 2005). 민족정체성을 강하게 가질수록 외부집단에 대한 경계심이 강할 수 있으며 반대로 외부집단에 대한 위협인식이 클수록 민족집단 내부의 결집을 강화시킨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민주적 시민성의 차이가 세계화로 가속화되고 있는 자본 및 노동의 국내유입에 대한 위협감의 차이를 가져오는지 살펴봄으로써 민주적 시민성의 성장과 민족정체성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를 검증해보고자 한다.⁹⁾

9) 이러한 정체성 변수는 민족정체성이 수입자유화 정책에 대한 정치적 선호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랭킨(Rankin, 2001)이나 미국의 일반적 대외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민족정체성 요인의 영향을 분석한 사이트린 외(Citrin et al. 1994)의 분류와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랭킨의 모델은 요인분석을 통해 민족정체성 요인으로 ① 애국주의(patriotic), ② 주권(Sovereign), ③ 문화적 요인(Cultural)이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분류했다. 애국주의의 경우 주로 필자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자부심/소속감 요인과 동일한 의미이며, 주권요인은 본 연구의 주권요인으로 대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일의 국가정체성을 경험적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버뱅크(Burbank, 2003:

2) 민주적 시민성의 측정지표

위에서 언급한 민족정체성의 네 가지 하위범주에 민주주의적 시민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민주적 시민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지표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들의 민주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7개의 질문 중 요인분석을 통해 민주적 시민성척도를 만들었다. 주성분 분석결과 추출값이 0.5 이상이 되는 5개의 질문은 하나의 차원으로 묶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⁰⁾ 새롭게 만든 민주적 시민성척도는 ① 국가에 대한 개인의 자유보장, ② 소수의견에 대한 존중, ③ 국민들의 정치참여 자격에 대한 평가, ④ 참여정치의 정당성, ⑤ 저항권 등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들에 대한 국민인식을 묻는 질문들을 통합한 결과이다. 민주의식을 구성하는 이들 항목들을 통합함으로써 국민들의 민주적 시민성의 높고 낮음을 양적으로 표현하는 척도를 만들고 이를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의 간결성을 유지하고자 한다.¹¹⁾

8~9)는 애국주의(patriotism)와 계급이나 지역과 같은 사회적 집단 정체성(social group identity), 인종중심주의 등의 문화적 민족주의(cultural nationalism) 요인들로 구분하고 독일의 민족정체성은 젊은 세대와 교육, 지역 등의 변수가 주요한 설명요인이라고 주장한다. 랜킨과 버뱅크의 모델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문화적 요인은 본 연구의 민족경계의식 요인으로 대체 가능하다.

- 10) 척도의 신뢰성(reliability)을 보여주는 Cronbach's α 검증 결과 역시 0.611 통계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11) 이들 질문들은 '국가를 위해 개인은 희생해야 한다', '다수의 의사에 소수는 복종해야 한다', '국민은 정부가 하는 일에 발언할 자격이 없다', '사회는 소수의 지도자가 다스릴 때 잘 된다', '정부지시는 잘못이 있더라도 따라야 한다'는 진술에 대한 동의여부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는 4점 척도로 동일하다. 다섯 문항에 대해 응답한 값을 합한 후 다시 민주적 시민성이 '낮은 집단', '중간집단', '높은 집단'이라는 세 집단으로 나누어 다양한 민족정체성

〈표 4-2〉 민주적 시민성지표에 포함된 항목 요인분석 결과

민주적 시민성지표	적재값(39.622)
국가 위해 개인 희생해야 한다	0.531
다수의사에 소수 복종해야 한다	0.594
일반국민은 정부정책에 발언자격 없다	0.601
사회는 소수의 지도자가 다스릴 때 잘 된다	0.701
잘못된 정부결정이라도 복종해야 한다	0.702

주: 1) Cronbach's $\alpha = 0.613$

2) 보기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민주적 시민성지표가 보여주는 세 집단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의미 있게 구분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연령·학력·주관적 이념이라는 세 가지 변수와 교차분석을 해 보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민주주의이념을 둘러싼 이른바 권위주의시대의 '민주 대 반민주'의 정치적 균열선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한국 민주화과정에서 민주주의운동의 주력이 주로 젊은 학생층, 화이트칼라층, 이념적으로는 진보층이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강원택, 2004). 〈표 4-3〉에서 민주적 시민성의 지표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역시 젊은 세대일수록 민주적 시민성지수에서 상위집단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반대로 나이는 세대일수록 하위집단에 속한 비율이 높다. 학력별로도 한국 민주화과정에서 고학력 화이트칼라의 기여가

요인과의 관계를 보여주고자 한다. 4점 척도의 문항 5개를 합할 경우 나오는 값은 5점에서 20점까지이다. 자의적이긴 하지만 5점과 20점의 중간인 13점부터 중앙값(media)인 15점까지를 중간집단으로 규정했다. 참고로 평균은 14.8점으로 이 구간 내에 포함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13점 미만의 응답자들은 민주적 시민성이 낮은 집단으로, 16점 이상의 응답자들은 민주적 시민성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표 4-3〉 사회경제적 배경변수와 민주적 시민성지표(%)

전 체 (1,038)		민주적 시민성		
		저	중	고
		187 (19.0%)	408 (41.5%)	389 (39.5%)
연 령	20대 (21.6%)	10.5	37.9	51.6
	30대 (24.7%)	16.5	42.6	40.9
	40대 (23.0%)	19.6	44.3	36.1
	50대 이상 (30.7%)	27.2	40.8	32.0
학 령	중 졸 (15.9%)	31.5	40.9	27.5
	고 졸 (37.0%)	22.3	44.4	33.3
	대 재 (47.0%)	12.2	39.4	48.4
이 념	진 보 (32.9%)	17.8	36.1	46.1
	중 도 (39.8%)	17.2	44.9	37.9
	보 수 (27.2%)	23.1	43.3	33.6

켰던 만큼 대재 이상의 고학력자가 민주적 시민성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념적으로도 진보층이 민주적 시민성의 상위집단에 포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민주적 시민성점수에 따른 집단구분이 한국민주주의를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균열양상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3) 데이터

자료로는 2005년 동아시아연구원·중앙일보의 “국가정체성 여론조사 데이터”를 활용한다. 경험적 자료로서 개개인의 선호와 태도를 조사한 서베이데이터를 활용하는 이유는 자료접근이 용이할 뿐 아니라 정체성

이라는 개념 자체가 개개인이 가진 소속감, 인식태도, 규범 등 주관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각 개인의 인식태도와 가치를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자의적 해석을 피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Abdelal et al.,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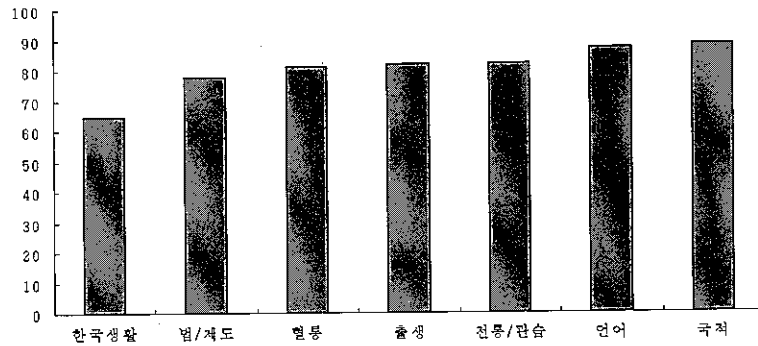
4. 분석결과

1) 민주적 시민성과 민족경계: 민족공동체의 경계구분의 배타성

(1) 민족구성원의 자격

한국인이 생각하는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이 무엇인지를 문항을 통해 민주적 시민성이 한국인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을 구분하는 기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전체국민의 응답을 보면 한국국적을 가졌는지 여부가 한국인과 비한국인을 구분하는 가장 포괄적 기준으로 나타났고, 언어(87) > 전통 및 관습에 동화(82.1) > 출생지(81.9) > 혈통(80.9) > 법/제도의 준수(77.5) > 한국에서의 장기생활(64.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인들은 출생지나 혈통과 같은 선천적 요인들을 한국인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또한 후천적 요인이라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 외국에 나간 동포들이나 한국에 갓들어온 외국인들로서는 획득하기 쉽지 않은 한국어의 사용이나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동화와 같은 자격요건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는 국적이나 혈통을 공유하거나 실질적으로 동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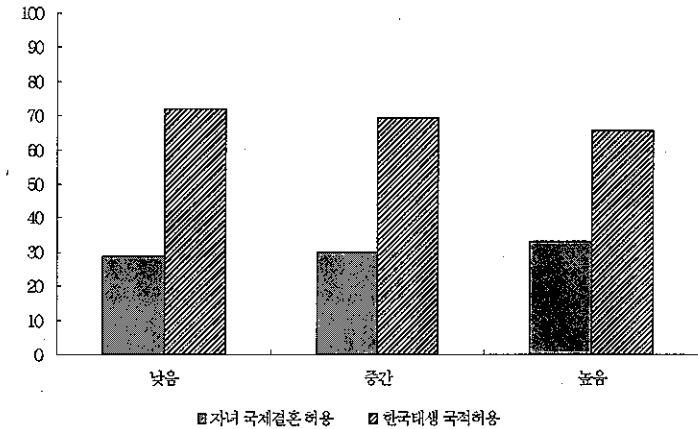
12) 참고로 같은 문항에 대해 민주적 시민성이 다른 집단별로 일원분산분석(ANOVA) 테스트를 해 보면 민주적 시민성의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사이에 ‘법과 제도의 준수’나 ‘한국에서의 장기생활 여부’라는 후천적 요인에 대해서

〈그림 4-4〉 한국인의 자격요건: 동의비율(%)¹³⁾

민주적 시민의식이 민족경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자녀의 국제결혼을 허용할 것인가’ 문항과 ‘부모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한국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응답을 통해 분석해도 비슷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전체국민들 중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한국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 비율(67.5%)이 높다. 이는 혈통이 다르더라도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사람으로서 동화될 수 있다면 한국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

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주요 요인들에 대해서는 태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적 시민성이 높은 집단 역시 평균값이 높은 순서대로 각 요인의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국적(3.38), 언어(3.32), 출생지(3.22), 역사/전통 동화(3.17), 혈통(3.10), 제도/법 준수(2.93), 한국생활(2.79)로서 전체 응답자가 중시하는 요인들로 전체 응답자가 응답한 순서와 정확하게 일치했다. 여기서는 1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이며 4가 매우 중요하다고 역순으로 재코딩한 값을 평균낸 값이다.

13) 총 빈도수: 1,038명, 수치는 1. 매우 중요 2. 약간 중요 3. 중요하지 않은 편 4.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4점 척도에서 1과 2를 합한 비율이다.

〈그림 4-5〉 민주적 시민성과 민족경계의식: 동의한다(%)¹⁴⁾

기자녀의 국제결혼을 허용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비율(30.3%)이 매우 낮다. 자신의 혈통문제에서는 여전히 배타적 성향을 보여준다.

보편적 범세계주의이론이 타당하다면 민주적 시민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민족공동체의 경계에 대해 보다 개방적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를 보면 민주적 시민성과 민족적 경계에 대한 배타성에는 이렇다할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림 4-5〉에서 자녀의 국제결혼 허용문제에 대해서는 민주적 시민성이 높을수록 보다 완화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한국태생의 외국인 국적 허용문제에 대해서는 이들이 오히려 엄격한 태도를 보여준다. 또한 양

14) 총 빈도수: 984명, 민주적 시민성지표에서는 모름/무응답은 제외한 결과이다. 수치는 1. 매우 동의 2. 대체로 동의 3. 그저 그렇다 4. 약간 부정 5. 매우 부정이라는 5점 척도에서 1과 2를 합한 값이며 카이제곱 검정결과 두 질문에 대한 응답과 민주적 시민성지표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p > 0.05$).

입장 모두 카이제곱 검정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결국 민주적 시민성이 민족구성원 자격기준에 대한 태도를 약화시킨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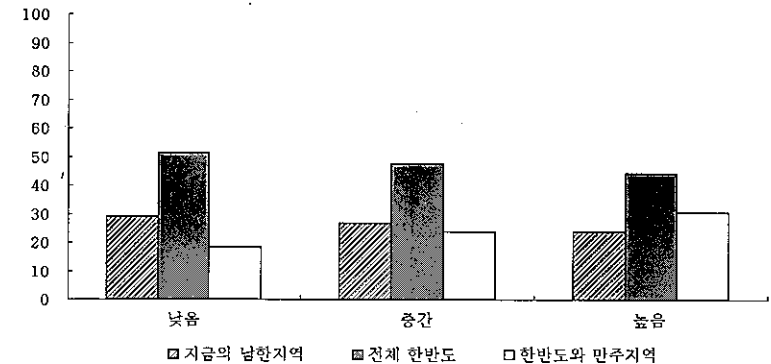
(2) 민주적 시민성과 민족경계: 공동체의 영토적 경계

국민들이 생각하는 민족공동체의 범위에 대해 민주적 시민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자. '우리' 민족공동체로서 상상하는(imagined)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민주적 시민성은 이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한국의 국경이 어디까지인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의외의 결과가 도출된다. 전체 응답을 보면 현재의 남한지역만을 꼽은 응답이 25.8%, 한반도 전역으로 본 응답이 47.1%, 한반도전체와 만주지역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5%나 되었다.

〈그림 4-6〉에서 민주적 시민성의 수준별로 살펴보면 물론 모든 집단에서 남과 북을 아우르는 한반도전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는 응답이 다수(51.3%, 47.5%, 44.2%)였다. 그러나 민주적 시민성이 높은 집단에 속할수록 고대 한민족의 활동무대였던 만주지역까지 한국의 영토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민주적 가치와 국수적·팽창적 민족주의 간의 관계에 대한 별도의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최소한 한국에서 민주적 시민성의 성장은 극단적 보편주의가 가정하는 세계시민성(cosmopolitan citizenship) 가설이 한국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인들은 민주적 시민성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혈통·국적·언어 등 문화적·혈연적 동질성을 중시하고 민족공동체의 경계에 대해 뚜렷한 경계인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혈통 유지에 대한 집착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민족정체성의 영토적 범위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대체로 현재의 분단된 국가를 인정하기보다는 통일된 민족국가를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6〉 민주적 시민성과 한국영토(%)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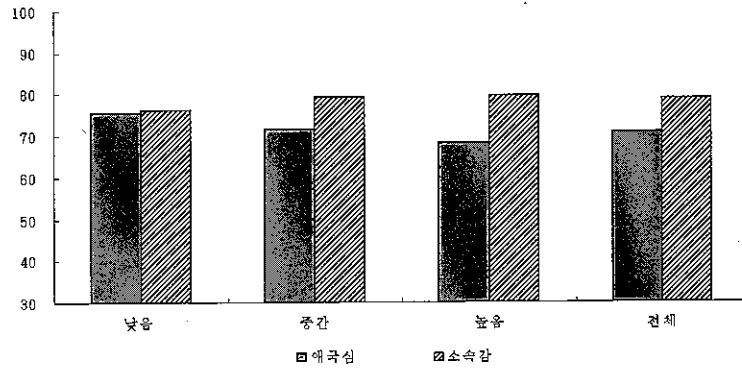


2) 민족공동체에 대한 정서적 경계: 애국심과 일체감

애국심(patriotism)과 국가일체감(identification)은 민족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애착을 표현해주는 지표이다. 특히 애국심은 상상의 공동체인 민족과 그 구성원들을 심리적으로 연결해주는 요소로서 민족정체성의 핵심측면을 이룬다(Rusciano, 2003: 361). 또한 친밀감 역시 사회적 집단의 규범과 이해관계를 공유함으로써 집단의 선호와 개인의 선호를 일치시키는 심리적 일체감의 또 다른 표현이다(Campbell, 1964).

한국국민들은 강한 애국심과 대한민국에 대한 높은 일체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 결과를 보면 애국심지표에서 민주적 시민성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애국심의 강도가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민족정체성을 구성하는 또 다른 심리적 지표인 일체감을 보면 민주적 시민성과 민족일체감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5) 카이제곱 검정 결과 두 변수 모두 민주적 시민성지표와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p > 0.05$).

〈그림 4-7〉 민주적 시민성과 민족에 대한 심리적 애착(%)¹⁶⁾

〈그림 4-7〉을 보면 한국인의 79%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체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주적 시민성이 높을수록 그 빈도가 조금씩 높아진다. ‘매우 가깝다’고 응답한 사람만 보면 그 차이가 더욱 명확해진다. 민주적 시민성점수가 낮은 집단의 응답자 중 21.5%만이 대한민국 국민에 매우 가깝다고 응답했지만, 민주적 시민성점수가 높은 집단의 응답자들은 그보다 10% 이상 높은 33%가 매우 가깝다고 응답했다.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위의 두 문항에 대해 평균값을 비교해 보았다. 17) 분석결과 민주적 시민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애국심은 약해지고

16) 애국심은 ‘나는 다른 나라 국민이기 보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다’에 대한 5점 척도 보기 중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런 편’을 합한 값이며, 일체감은 ‘귀하께서는 다음 집단에 얼마나 가깝게 느끼십니까?-대한민국 국민’ 문항에 대한 4점 척도 보기 중 ‘매우 가깝다’와 ‘가까운 편이다’를 합한 값이다. 두 질문 공허 카이제곱 검정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 < 0.05$).

17) 이 평균값의 비교는 분산분석(ANOVA) 테스트의 결과이다. 그러나 종속변수로 삼은 애국심과 소속감 문항의 척도가 등간척도가 아니기 때문에 분산분석 결과의 통계학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참고로 ANOVA

〈표 4-4〉 민주적 시민성과 민족공동체에 대한 애착: 평균비교

	민주적 시민성	빈도 수	평균 값
일체감	낮 음	181	2.93
	중 간	396	3.03
	높 음	382	3.08
	전 체	959	3.03
애국심	낮 음	185	3.94
	중 간	408	3.93
	높 음	384	3.86
	전 체	977	3.90

한국민으로서의 일체감이 커지는 경향은 존재하지만 두드러진 차이로 보기는 힘들다. 민주적 시민성지표가 민족공동체에 대한 일체감이나 애국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심리적 차원의 민족공동체에 대한 애착에 대해 민주적 시민성은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민주적 가치의 보편성이 민족경계를 약화시키고 세계시민의 정체성을 확대할 것이라는 보편주의의 입장을 수용하기는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적 시민성이 민족경계의식이나 심리적 정서에서의 민족일체감을 적극적으로 강화시킨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민주적 시민성이 높은 집단들도 혈연, 언어, 문화적 동화 등을 민족경계의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심리적 차원에서도 다수가 민주적 시민성의 높고 낮음과는 관계없이 애국

테스트 결과 집단간 평균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여기서는 통계적 의미보다는 단순한 평균값의 차이를 참고하는 정도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심과 민족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민족적 애착은 민주적 시민성과 배타적 관계는 아니라는 결론이 가능하다.

3) 주권인식

민족정체성을 측정하는 세 번째 지표로서 주권인식과 민주적 시민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자. 민족정체성을 경험적으로 연구한 기존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주권인식을 민족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개념의 하나로 제기한다(Rankin, 2001; Citrin et al., 1994).

주권(sovcreignty)은 외부의 힘으로부터 영토, 문화적 표현, 정치경제적 통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힘으로 이해되며 이는 외부관계 속에서 민족정체성을 보여주는 핵심적 지표 중의 하나이다(Rankin, 2001: 361). 그러나 주권의 절대성과 민족주권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앞서 말한 국수주의적 민족주의로 귀결될 우려가 높다. 한국인의 주권인식에 대해 민주적 시민성이 미치는 영향을 경제주권 및 군사주권 관련이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¹⁸⁾

우선 경제적 주권문제로 인식되며 광범위한 국민적 반대가 형성되고 있는 쌀시장개방 이슈의 경우 학력과 소득에 따른 편차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표 4-5>에서 전체 응답자의 69%가 쌀시장개방에 반대한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한국 정치 균열의 주요축인 세대, 이념 집단별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학력에서는 고학력자일수록, 고소득자일수록 쌀시장개방에 반대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이들 집단 역시 65% 이상의 높은 찬성률을 보인다는 점에서 정치적 균열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표 4-5> 주요변수들과 대외주권관련 이슈: 찬성(%)¹⁹⁾

		대외주권	
		“쌀시장을 개방해서는 안 된다”	“한국도 핵개발해야 한다”
	전 체 (1,038)	68.9	66.6
연 령	20대	71.2	63.8
	30대	71.2	73.4
	40대	60.9	72.3
	50대이상	74.3	66.7
학 력	중 졸	80.2	68.0
	고 졸	70.1	70.0
	대 재	65.9	68.8
소 득	~200만 원	74.4	71.6
	~299만 원	70.6	69.1
	~300만 원	66.3	64.4
	400만 원~	65.7	74.2
이 념	진 보	70.0	67.7
	중 도	69.6	69.3
	보 수	69.9	70.1
민주적 시민성	저	70.6	72.4
	중	67.6	69.3
	고	70.6	65.9

18) 쌀시장 개방반대 이슈와 한국의 핵개발권 이슈를 주권요인을 측정하는 대표적 개념으로 설정한 근거는 이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혹은 정치인들의 핵심 개념과 논리가 ‘주권’의 보호와 이를 실현한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19) 두 질문 모두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라는 긍정응답자의 비율을 합한 값이다.

따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민주적 시민성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경제주권에 대한 태도의 편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편적 극단주의가 가정하듯이 민주적 시민성이 주권개념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군사적 차원의 주권개념에서 살펴보더라도 한국국민들 사이에 군사주권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핵개발권리를 중심으로 군사주권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분석해보면 연령이나 학력, 소득, 이념 등은 핵주권에 대한 입장차이를 만들어내는 유의미한 변수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적 시민성지표도 민주성이 강할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약간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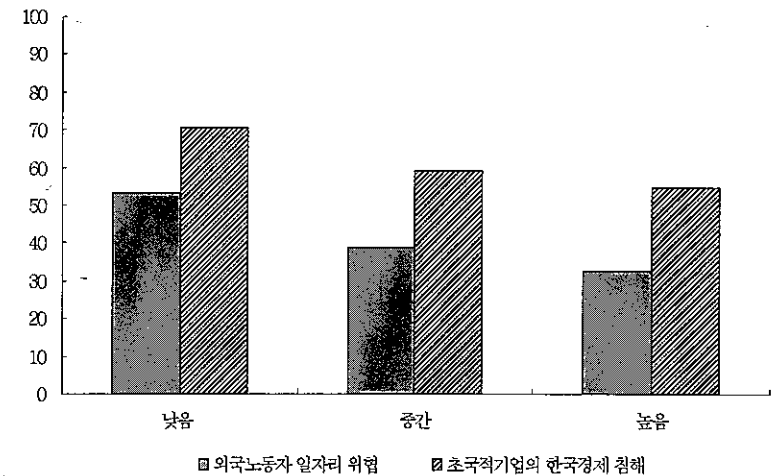
종합해보면 경제적·정치군사적 주권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인들은 통합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민주적 시민성은 특별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4) 외부위협인식

루치아노는 민족정체성은 민족내부의 힘들과 외부의 힘들 간의 조정(negotiation)을 통해 결정된다고 하면서 민족내부의 요소들에만 주목하는 입장에 비판적이다(Rusciano, 2003: 361).

민족정체성의 주된 내용이 내부집단(ingroup)보다는 외부집단(outgroup)과의 관계에서 형성된다는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 SIT이론)에 따를 경우, 외부위협인식은 민족정체성의 핵심지표 중의 하나가 된다. 민족정체성이 공동체구성원들이 갖는 인식과 심리적 공감대를 반영함과 동시에 외부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관계적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Abdelal et al., 2004). 여기서는 세계화 이후 불가피하게 확산되는 외국자본과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에 대한 인식을 통해 외부위협

〈그림 4-8〉 민주적 시민성과 외부 위협요인들에 인식: 우려 비율(%)²⁰⁾



인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4-8〉을 보면 민주적 시민성지표가 높은 사람일수록 외부유입요인에 대해 보다 관용적 태도를 보여주고, 반대로 시민성지표가 낮은 사람일수록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자본에 대해 보다 큰 위협을 느낀다는 점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먼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민주적 시민성의 차이가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자본에 대해서도 같은 패턴이 동일하게 나타난다.²¹⁾

20) 총 빈도수: 외국인 노동자 문항 984명, 초국적기업 문항 955명(모름/무응답은 제외)이며, 수치계산은 외국인 노동자 문항은 1. 매우 동의 2. 대체로 동의 3. 그저 그렇다 4. 약간 부정 5. 매우 부정이라는 5점 척도에서 1과 2를 합한 값이다. 한편 초국적기업 문항은 1. 매우 동의 2. 대체로 동의 3. 약간 부정 4. 매우 부정이라는 4점 척도에서 1과 2를 합한 값이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두 변수 모두 민주적 시민성지표와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p < 0.01$).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적 시민성은 지금까지 여타의 민족정체성의 하위범주들의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했다. 그러나 최소한 외부위협요인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관용적 태도(*tolerance*)를 강화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성이 자국의 주권을 절대시하는 국수주의적 민족주의로까지 발전하는 것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민주적 시민성의 확대가 관용적 태도를 강화한다는 것이 민족적 경계의식의 약화로까지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다시 한 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 연구에서는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간의 이론적 논쟁을 벌여왔던 ① 극단적 보편주의(범세계시민주의), ② 국수주의적 민족주의(민주적 시민성 없는 민족주의)가 서로 근본적 입장차이를 가지면서도 민주주의와 민족주의가 양립불가능하다고 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보았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와 민족정체성을 강화한다는 '민주적 민족주의'이론이 한국의 현실을 설명하는 데 적절한지 검토하고자 했다. 또한 이 연구는 한국의 민족정체성에 민주주의의 성장이 미치는 영향을 민족정체성 개념을 하위 네 차원, 즉 ① 경계의식, ② 심리적 정서, ③ 주권의식과 ④ 외부위협 인식차원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조사결과로 보면 보편적 범세계주의가 가정하는 것처럼 민주적 시민성의 성장이 민족정체성의 약화를 가져온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

다. 또한 네 가지 하위개념별로 민주적 시민성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기존이론들이 가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위개념의 내용에 따라 선별적으로 민주적 시민성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로 민주적 시민성의 성장이 민족에 대한 심리적 애착은 강화시키는 반면 공동체외부의 세력에 대해서는 관용적 태도를 강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극단적 보편주의나 민주적 민족주의이론 모두 제한적으로만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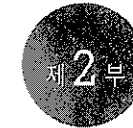
다만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보여준다. 첫째, 민주주의이론이나 민족정체성 이론들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경험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각 개념의 지표설정이나 이론적 가설 설정이 주로 해외이론에 근거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적 맥락에 맞는 민족정체성 개념으로서 타당성을 갖는지 차후 연구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실제 민족정체성의 하위범주들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에 대한 축적된 연구가 부족한 관계로 이 연구 역시 새로운 설명변수들을 찾아내는 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이 논문의 목적이 민족정체성의 변화를 설명하는 새로운 요인의 발견보다는 민주적 시민성의 설명력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결과이기도 하지만 민족정체성을 설명하는 변수들을 밝혀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후속연구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민주적 시민성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는 철학적·정치이론상의 논쟁을 이 연구과정에는 포함시키지 못한 것도 근본적 한계 중의 하나이다. 이 글에서 다루는 민주적 시민성은 주로 '자유주의'(*liberalism*)적 차원의 소극적 시민성개념에 가깝다. 현재 세계화시대에 자유주의적 원칙만으로 국민개인의 자유와 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으며 민주적 시민성개념의 확장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곽준혁, 2004: 45~46). 이론적 논쟁으로부터 도출되는

21) 수치상으로 보면 외국자본에 대한 인식이 외국노동자에 대한 인식보다 부정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해석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양 문항의 측정 지표가 전자는 4점 척도, 후자는 5점 척도이기 때문에 후자의 수치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원래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개념들이 경험영역에서 확인되고, 반대로 경험세계의 결과들이 순수개념에 반영될 때 학문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적 시민성개념을 둘러싼 이론적 논의의 진전을 경험적 분석모델에 반영해나가는 시도들 역시 후속연구의 핵심과제가 될 것으로 본다.



국가정체성과 통합

제 5 장 해방정국과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과 민족과 국가정체성
김장수

제 6 장 한국인의 역대정권 평가와 역사자긍심
이현우

제 7 장 한국인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과 국가정체성
이내영

제 8 장 한국인의 탈물질주의
한 준 · 이재열